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2008년 1월 30일(수)

25th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위원장 신입사원 교육

신입사원, 정책부터 복지까지 높은 관심 보여

2008년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재식위원장이 1월 21일 원주리 다심아카데미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지재식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방식과 현황 등을 소개했다. 노동조합의 12개 지방본부, 430여개 지부, 그리고 중앙본부의 각 실체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노동조합의 역사와 제도, 근로조건 개선 등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IT연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노동 및 통신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노동조합의 활동이 한 기업 내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신입사원들은 놀라워하기도 했으며 KT 노동조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다.

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지재식위원장은 분사뿐만 아니라 현업 작은 지점까지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하고 있다며 신입사원이 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배치되면 해당 지부를 찾아가 필요한 도움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지재식위원장의 교육 후 신입사원들의 질문시간이 진행됐다. 다음은 그 시간에



나온 몇가지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질문 KT에 연령분포가 고령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인력이 축소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현재 노동조합이 파악하기로는 4년 후부터 본격적인 정년퇴직자가 발생해 5년동안 1만6천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회사에 신규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적정수준의 인력 확보와 함께 업무와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적정인력에서 10%정도는 초과 채용해 해당인력만큼 지속적인 순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

질문 현재 퇴직자들을 위해 KT플라자를 제공하는 등 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퇴직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현재 회사가 그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자들에게 KT플라자를 주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는 퇴직사우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년퇴직자들의 제2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퇴직자 프로그

램이 아니라 정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질문 기념일에 기념품비 명목으로 복지카드가 충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입사원의 경우 1월 7일이 입사일이기 때문에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되는가?

기념품비는 매년 초 복지카드 충전을 통해 일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일이 조합 창립기념일 이후라는 점을 염두해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부분은 사측과 협의를 통해 지급되도록 하겠다. (이후 신입사원들에게도 조합 창립기념품비를 지급하기로 함)

질문 주택자금 대출 자격이 입사후 3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현재 주택자금대부 신청자 자격기준을 3년 후로 둔 것은 복지자금 원금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현재 점점 지급시기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기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사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대부받을 수는 없다. 향후 더 많은 복지자금의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기를 줄이도록 하겠다.

질문 일반적으로 민주노총이 강경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KT노동조합은 어떠한 변화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가?

민주노총의 강경한 이미지는 사실 보수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도 있으며 노동조합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배경도 있다. 사측이 유도하기도 했고 노동조합이 강경하지 않으면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KT노동조합은 이러한 갈등구조의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신입사원교육은 단체협약 제37조에 의해 신입사원 교육이 노동조합에 2시간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 창립 26주년 기념식 및 합동추모제

노동조합은 1월 4일 유평피아 추모관에서 창립26주년 기념식과 합동추모제를 실시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올해 한국의 통신산업의 격변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철저히 준비해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완전한 "직군 직렬·통폐합"과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냈던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고(故) 김낙성 동지의 동생인 김낙은 유족대표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추모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KT 노동조합 조합원들께서 먼저 가신 분들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유평피아 추모관에 추모비를 마련하고 고 김낙성, 고 김왕찬, 고 오용철, 고 김양중 동지를 추모하고 있다.



2008년 성과급(효도휴가비 포함) 지급계획

구분	효도휴가비	성과급	차등율
2월	100% (2/4)	50%	미차등
3월		미확정 (2007년도 종합성과에 따라 확정) (확정율-350%)전여역 적용	-25% ~ +45% (연봉·호봉제 동일)
6월		100%	미차등
7월		임금보전 50%	
8월		100%	-20%~+35% (연봉·호봉제 동일)
9월	100% (9/11)		
11월		100%	미차등
12월		임금보전 50%	

지급계획 및 일시

* 성과급지급율 = 수익성지급율 + 성장성지급율

- ① 수익성지급율(성과이익율 13% 이상시) = 440% + (성과영업이익율-13) × 10%
- ② 성장성지급율 = 매출성장율 1% 성장당 8.5% 적용

지급계좌

- 가. 효도휴가비 : 별도계좌 (급식통근비 계좌)
- 나. 성과급 : 급여계좌

초등학생 교육보조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초등교육보조비 관련하여 전화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절차

- '대상' 구분함에 따라 신청절차 상이(유아교육보조비와 동일)
- '대상' 자녀 : 생년월일 95.3.1~97.2.28일생 자녀중 해당자, 조합원 본인이 직접 신청
- '비대상' 자녀 : 그의 생년월일 자녀중 해당자, 기관담당에게 자료제출(기관담당 : 유아교육보조비 월보고 양식 준용, 증빙서류는 기관담당 보관)

신청시 주의사항

- 2008.2월 6학년 졸업대상자녀 : '지급대상년도'를 반드시 '2007'년으로 선택할 것 (시스템입력 2008.1.1일부터 2008.6.30일까지 신청가능) 가능한 2월중 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청바람
- 2008.3월이후 6학년 재학예정자녀 : '지급대상년도'를 반드시 '2008'년으로 선택할 것 (시스템입력 2008.3.1일부터 2008.9.30일까지 신청가능)



KT노동조합 창립26주년 기념사

올해로 노동조합 창립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KT노동자의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공사전환에서 시작된 KT노동조합의 역사는 민주화와 민영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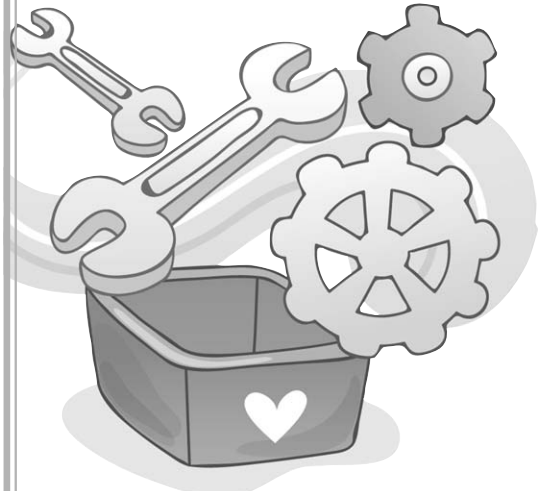
조합원여러분! 2008년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품게 하는 해이면서 도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IPTV가 본격 시행될 것이며, VoIP 등 각종 융합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28일 IPTV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른바 올해 상반기중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조합은 2007년 IPTV법안 확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외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도입시기가 다소 늦은 측면이 있지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 역무의 단순화로 서비스간 융합이 쉬워지고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특히, SKT의 하나로통신 인수 등으로 인해 통신환경의 유무선, 통신방식 등의 융합은 더욱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KT도 기술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의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이를 뒷받침할 성장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해서 장밋빛 청사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환경변화는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회사는 13조에 이르는 매출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높은 매출목표는 능동적이며 공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 매출에 급급해 무리수를 두는 행위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비영업부서에 상품을 할당하는 행위, 허수를 만들어 조작하는 행위 등 구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과거 내부의 출혈경쟁, 짜깁기 식의 허수경영 등이 KT에 얼마나 많은 폐약을 끼치지 않았는지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KT내의 공동체의식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복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재연된다면 노동조합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지난 2007년은 노동조합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자원적 해소함으로써 직군직렬통폐합이 완전하게 이뤄졌습니다. 또한 해고자 2명의 복직에 합의함으로써 해고자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도 노동조합의 역사에 굵직한 획을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나 노동조합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조합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창립기념사를 갑니다.

2008년 1월 4일
KT노동조합 위원장 지재식



2008년 달라지는 제도

2008년 달라지는 제도

2008년 새해가 시작됐다. 연초면 올 한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인데 바뀐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부동산, 세제, 금융보험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보자.

→ 세제부동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올 1월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근로자들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2008년 12월 소득공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많이 쓸수록 많이 환급해주는 방식인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현재와는 달리 올 7월부터는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제도 개선과 합산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우자간 증여세 한도 확대(3억원·6억원)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상속공제 금액인 30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미리미리 영수증을 꼭 챙길 필요가 있겠다.

출산 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당 연도에는 출산 및 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와 자영업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인적범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포함된다.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폐지와 양도세 경감

현재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달러이지만, 2008년 상반기부터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또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2008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공공주택 후분양제 시행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주택은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후분양제는 2010년에는 공정률 60% 시점에서 2012년에는

공정률 80%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후분양을 하면 실물 주택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목돈을 한꺼번에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사전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원래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주택 지역우선 공급요건 강화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가운데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명확해진다. 지금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모호해 지자체별로 6개월 내의 거주자로 적용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1월 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전·월세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에도 전매 제한 및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금융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한은, 신규 기준금리제 도입

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부터 콜금리 운용 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자레식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BIS제도 시행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하게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을 경우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보험

생·손보 교차판매 허용

8월 30일부터 생명보험 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손해보험 설계사는 1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생·손보 교차판매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취약해진 설계사의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생·손보 상품에 대한 윈스톱쇼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 시행

기존 이륜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는 이륜차의 책임보험료는 전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륜차의 사용용도와 배기량,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 된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 중 소액손해미보상상품, 자기차량손해 중 대차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 등을 개발, 판매할 예정이다. 자기차량손해 중 자기부담금 한도금액을 확대해 이륜차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설명제도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금 지급 시에는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이 구축돼 보험금 지급 설명서가 교부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 산출근거를 안내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

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가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상반기중 구축된다. 이에 따라 중복가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에서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의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처벌강화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운전자 처벌강화가 2007년 12월21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2009년 12월부터는 스피드 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

국민연금 급여율 하락

국민연금이 가입하는 이들은 40년간 보험료를 내도 평균소득의 50%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평균소득의 60%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지급률이 40%로 떨어진다.

국민연금 등급제 폐지

올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오른다.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0.31%포인트 오른다.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0%로 높아진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을 해도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양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제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전체노인의 60%(301만명)는 달마다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 노동및법무

육아 휴직제 개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휴가제도가 신설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준다.

주 5일제 확대

7월부터 현행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5일 근무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가 뒤따르고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다.

최저임금 지급 3천770원으로 인상

올 1월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지난해 3천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천770원이 적용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천160원)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만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만7천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만2천200원이다.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를 차별화해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양부 또는 친양자) 등으로 발급받는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2008년 상반기부터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이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남·충남지방본부 기름제거 자원봉사

시커먼 기름띠 걷어내고 바다를 살려요

전남지방본부 임종대 지방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본부 전원이 2008년 1월 10일부터 11일(1박2일)까지 서해안 전남 신안군 임자도 도찬리 일대 바닷가에서 기름(타르)제거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가져간 방제용품(장화, 낚시, 집게 등)과 격려금 10만원을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임종대 전남지방본부위원장은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이 안타깝지만 했던 터라 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청정지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실태를 접하면서 지역주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하루빨리 생태계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띠(타르)는 제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본부에서는 조중오 지방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상진, 지부장, 분회장 조합본부 40여명은 2008년 신년 조합본부 회의를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같은 날 1월 10일부터 11일(1박2일)까지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안에서 파도리 해안 바위와 돌에 붙어있는 기름제거 및 쓰레기 운반작업 활동에 동참했다. 또한, 각 지부에서 입지 않는 작업복, 조끼 등을 수거하여 태안 주민들에게 3 BOX를 전달하고 현지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특산물(고구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중오 충남지방본부위원장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생태회복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현지주민의 생계대책이 매우 어려워 안타깝게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우

리들의 조그만 노력이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현지주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상태가 악화된 관계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태안 시에서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사회단체별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큰일을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국민의 무서운 힘이다. 평소엔 모래처럼 각자인 듯하다가 때에 따라 콘크리트 같은 결집력을 갖기 마련이다. 자원봉사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있다는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우리의 힘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음을 느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부탐방 서울강남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말 많은 집행간부 그래서 일도 더 잘한다

지부집행위원들은 지부장에 대한 한마디는 “짧고 열정이 많다”는 것이다. 짧기 때문에 권위의식도 없어 조합원들은 단단 팀장보다 지부장을 먼저 찾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등에 번쩍 서에 번쩍 네트워크센터 내 7개 사이트를 일새 없이 돌아다닌다는 이종철 지부장으로 인해 지부는 생동감이 넘친다고 평가한다. 다만 너무 겸손한 나머지 지부장으로서 권위와 명예가 실추될까 걱정하는 이도 있다. 한 집행간부는 “조합원이 담당이나 팀장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부장이 챙기다 보니 너무 지부장에게만 의지하게 된다”며 “어느정도 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도 한다. 지부장이 있거나 말거나 집행간부들의 말은 끝이 없다. 지부장은 가만히 듣는 척하더니 잠시 자리를 비켜준다. 신경쓰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라는 지부장 나름의 배려이다. 집행간부 한명이 또 나서 말한다. “과거에는 지부실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러한 문턱은 없어졌다”고 칭찬하면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부가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 조합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물고기가 터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조합활동 이야기로 대화가 모아진다. 특히 중앙과 지방본부의 활동이 조합원의 근거리에서 보일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했으면 한다는 데 이구동성으로 요구였다. 이와 더불어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문화체육행사 등을 해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요청도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무뎠지거나 관심이 떨어진 것 같으면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조합간부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성격의 탓이 크다. 원래 이것저것 챙기는 성격이다 보니 조합원들과 잘 어울리게 됐다. 그렇다보니 조합원들이 지부장에 추천했는데 아버님의 반대까지 있었다. 사실 아버지도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었는데 조합활동이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반대하신 것 같다. 그러나 의외로 아내가 한번 해보고 힘을 북돋아주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조합원의 고충처리는 어떻게 하나.

지부장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조합원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제 성격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조합원들과 많이 접촉하게 된다. 이렇듯 조합원을 만나는 것이 지부장의 의무라기보다는 생활이 되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것도 아무 형식없이 대화 속에서 이뤄진다. 그 다음으로 고충처리는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에게서 접수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야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신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활동이 잘되는 건전모임은 무엇이 있는가.

나누리 봉사회와 KOR이라는 달리기 동호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나누리 봉사회는 5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는데 서



초구 강남구 일대에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회는 김장김치 담그는 것에서부터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 정말 열심히 뛰어다닌다. 또한 KOR은 40여명의 조합원들이 회원인데 매주 토요일 한강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점을 둔 사업과 2008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지부 조합원의 화합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분기마다 호프데이를 하고 봉사활동을 함께 한다. 또한 가족페스티벌(벚꽃, 영화보기 등), 지부간부 부부동반 송년회 등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 조합원들이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자제하려고 하지만 간혹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노력중이다. 한편으로 2008년은 최소한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나 노사간담회는 꼭 지키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해야 조합원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종철 서울강남네트워크서비스센터지부 지부장

정보통신부 폐지로 IT강국 가능한가?

‘인수위, IT강국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해야’

최근 ‘작은 정부’ 모토 아래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기구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부처 폐지와 주요 기능 타 부처 분산 계획이야말로 IT강국 유지는 물론 융합시대 미래 성장 동력까지도 사장시키는 중대한 오판을 범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황무지와 같은 정보통신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IT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를 짚어보면,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역사 속에 정보통신부는 부처 간 중복 규제와 갈등 속에서도 발전 전략을 구축하여, CDMA 상용화, 망 고도화 및 WiBro 국제 표준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반면 이러한 성과 속에 정보통신 산업의 사회공공성 약화와 IT강국을 떠받치는 IT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과오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정보통신 산업은 융합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은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 경계를 허물었으며, 주요 국가는 이를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규제 정립은 물론 기구 통합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금 우리는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고, IPTV 등 융합 산업을 주도적으로 건인할 수 있는 주무 부처 확대가 시급하다.

150만 IT노동자를 대표하여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보통신 산업 현황을 인식하고, IT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부 기구 개편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단지 ‘작은 정부’ 구현에만 몰입되어, 도리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차단하는 교각살우의 오판을 범치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1월 9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체신공제조합 파산업무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 **조합해산 및 파산경과**

1999. 06. 25	체신공제조합 해산 결의(6. 29. 해산등기)
1999. 08. 06	조합원 거출원금 지급
2000. 04. 24	조합원 할증금 산정액의 50% 지급
2000. 05. 18	조합의 파산신청(6. 5. 파산선고)
2000. 10. 05	1차 채권자집회 개최하여 채권액 확정(채권신고자 82,932명, 909억원)
2002. 04. 12	서울타워 건물하자보수 소송 확정판결(청구금액 3,013백만원, 확정금액 22억원)
2004. 03. 29	파산자 경이은행 부실채권 중 일부 채권 회수(4억원)
2007. 10. 11	특별기일(제2차 채권자 집회) 개최하여 채권액 최종 확정(채권신고자 1,452명, 19억원)
2007. 12. 31	관할 법원에 최후배당 허가신청

■ **지급시기 : 2008년 2~3월 경**

- 법원의 배당금 지급 허가와 제척기간 만료 후에 배당이 가능함

■ **지급방법 : 조합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

- 2000년도 거출금 원금 및 할증금 송금계좌
- 계좌변경 신청방법 : A4용지에 조합원 본인의 은행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나란히 복사한 후 하단 여백에 주소,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은행통장의 인감을 필히 날인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산1의3 서울타워(내) 체신공제조합 우편번호 : 140-022)

■ **예상 배당(지급)율 : 미지급 할증금의 약 18%**

■ **지급대상 : 84,380명**

- 배당금 지급 대상자는 1999.6.29일 체신공제조합 해산일 당시 정보통신부 및 KT 근무자

- 조합 해산일(1999.6.29) 이전 퇴직 조합원에게는 탈퇴금 전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향후 업무**

- 법원으로부터 배당허가 시 정보통신부 전 소속국, KT 전 소속국, 전국체신노동조합, KT노동조합, 퇴직자 동우회(정우회, KT동우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배당 안내 공문 발송
- 배당(송금) 실시
- 송금불가, 반송분에 대한 조회 및 재송금
- 계좌변경 요청 조합원 처리
- 최종 송금 불가 조합원의 배당금 공탁
- 공탁금 출금에 대한 안내 등

본인의 계좌 확인 및 지급금액의 문의가 많아 대략 1개월 이후 《체신공제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급계좌 및 지급금액 확인 후, 계좌변경 희망시는 상위 계좌변경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3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재정혁신안 가결, 2010년부터는 정률제 시행



노동조합은 24일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제43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620명(총994명)이 모인 가운데 △2007년 사업평가안 △2008년 사업계획안 △재정혁신안 △한국진보연대 가입안 △노동운동혁신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했다. 먼저 대의원들은 재정혁신안을 통과시켰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연맹비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 인상하고 2009년에는 추가1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은 2010년부터는 현행 일정액을 내는 '정액제'

에서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재정혁신안'은 지난 2006년부터 대의원대회와 지난해 두 번의 대의원대회에서 상정만 되고 성원 부족으로 인한 대회유예 및 무산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처음 연맹비 인상이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 2년 만에 비로소 현실화된 것이다. 뜨거운 논란이 내부에서 존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문제는 기타 안건으로 유보된 뒤 대회가 유회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벌써부터 물러오고 있는 '이명박 쓰나미'를 시련

하고 잔잔한 바람으로 바꾸는 승리를 만들어 보자"며 총연맹이 산하연맹과 지역본부, 산별노조를 포괄해 '이명박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개최 6시간 여 만인 밤 9시, 성원 부족으로 '투쟁본부 전환' 등이 담긴 사업계획안은 유회됐다. 한편, 사전 행사에서 IT연맹 가맹조직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박순태)과 케이티에프테크놀로지스노동조합 안호경 위원장이 민주노총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인수위, 29일 회동 파기 민주노총 "인수위 책임전가 알파한 핑계"

1월 29일로 예정된 총연맹과 이명박 당선자와의 회동이 하루를 앞두고 인수위에 의해 파기됐다. 총연맹은 28일 낮 12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선자와의 회동이 파기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보고하고 파기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주요 사실은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이명박 당선자 사이의 회동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다가 느닷없이 총연맹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 종로서에 출두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고, 총연맹이 이런 요구에 대해 반대의를 표명하자 29일 회동을 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대령명직 인수위가 주도한 회동 파기사

태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자 입장에서 민주노총과의 회동에 임박해 느닷없이 조건을 걸어 파기하는 행위가 안스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 회의 소집 등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이명박 당선자간 회동은 인수위 측이 지난 1월 4일 회동요청을 제안해왔으나 양측 실무자들이 회동해 노동현안 등 토론의제를 정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22일 총연맹 이용식 사무총장과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그리고 인수위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등이 면담한 자리에서 29일 회동일정을 합의했고, 25일 인수위 전문위원과 경호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면담과 함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 이영호 인수위팀장이 26일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종로서에 출두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총연맹은 28일 오전, 위원장 출두 불가를 최종통보했다. 인수위가 애초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출두요구를 걸어' 민주노총과의 회동을 파기한 문제에 대해 '법대료를 주장하는 이명박 당선자 측이 민주노총 길들이기 공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BBK주조작사태를 비롯한 서울상암동 특혜사태, 서울 도곡동방 문제 등에 대한 일체의 범죄적 혐의와 관련한 특검조사에 직접 응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 필수유지업무 교섭 회피해도 사용자 '면책'

노동부가 내놓은 '필수유지업무 운영안'에 따르면 '제도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됐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교섭을 해태하거나 방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 성격상 임단협 교섭과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경우는 단체교섭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행위행위도 불가능하다. 필수유지업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유지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받지 어렵고 사내 징계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거기 가면 다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뉴스를 한눈에

- 매일매일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조합소식, 일일소식지, 관련기사, 노보, 영상자료, 사진자료

우리끼리 나누는 정보

- 조합원 게시판
- 지방본부별 커뮤니티, 조합원경조사

내말씀 들어주소

- 고충처리, 토론게시판, 설문조사

유익한 여가생활

- 정보마당, 유머광장

www.kttu.or.kr